

## 원유 5% 증산운동에 다같이 앞장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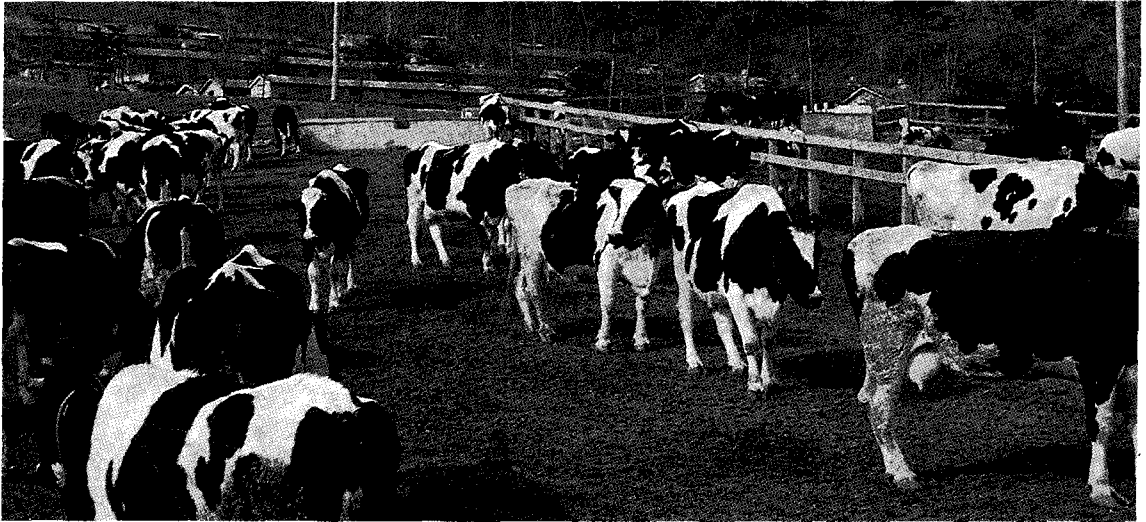
김 상 언  
(안양낙우회장)

불과 수개월전까지만 해도 분유체화로 낙농업계가 온통 혼란속에 빠져 있었던 상황을 상기해 볼때 분유수입이라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감정만 자아내게 한다.

낙농정책 부재를 성토해야 할지 아니면 낙농의 수급조절이 그렇게도 어려워 당연한 결과의 소산인지 너무도 답답한 생각만 치솟게 한다. 이 나라에서 낙농을 생업으로 땀흘리는 농민 누구도 정부의 분유수입에 수긍하려는 사람은 없으리라. 현실적으로 분유수입이 강행되고 정부의 계획에 맞춰 분유수입업무가 추진된다면 그것은 낙농가의 목인이 아니라 강제력에 의한 정부의 의도일 뿐이다. 침묵아닌 침묵속에 낙농가

의 소리가 조용하다면 그것은 일종의 체념일 따름이다. 아무리 외쳐보아도 반향조차 없으니 제반수입개방 추세에 농민들이 자포자기하듯 우리 낙농도 이제 이런 정도에서 쇠퇴일로를 걷게 되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유 8천톤 수입배경이 지난해 여름철의 무더위로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심화되고 하반기 요구르트 등 신제품 소비증가에 기인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공색한 변명을 들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젓소도태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농림수산부가 직접 나서서 전국 낙농가에게 공문과 자료까지 제작발송하면서까지 과잉



원유생산을 억제하여 연말 체화방지에 대비해야 한다던 강력하고 요란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나 자성의 소리조차 없다는데 대해 분노마저 일게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소비증가를 들먹이지만 실상 지난해 4월부터 소비가 생산을 앞지르고 있었다. 설사 정부의 추정이나 예측이 연말 분유체화가 우려될만큼 생산과잉이 야기되었다라든 하반기부터 생산이 부족할 조짐이 나타났다면 즉시 젓소도태를 삼가하고 원유증산에 매진해 달라는 요청을 낙농가에게 제시하면서 증산정책에 집중해야 당연한게 아닌가.

남을 때는 젓소를 잡아 감산하도록 하고, 그것도 불황시 유업체에 대한 공동홍보나 신제품 개발노력 부재에 대해서는 규제조치가 전혀 없었으면서도 낙농가에 대한 일방적 불이익을 묵인해 온 정부가 당연한 정책결과로 원유부족을 초래케 하여 분유수입을 강행한다면 도대체 우리 농민은 무얼 믿고 낙농에 종사할 수 있는지 우둔한 당국을 저주마져 서슴치 않게 한다.

분유수입 반대를 외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결과를 너무도 뻔히 내다보기 때문이다.

우선 분유수입이 시도된다면 수입에 대한 일종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 팽배로 낙농가 모두가 위축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만다. 따라서 영세한 사육기반에서 더욱더 위축을 가중시켜 생산기반의 붕괴는 그야말로 낙농의 근본이 흔들리는 결과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낙농가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다.

계속적인 감소 추세는 결국 소비의 자연증가에 따르지 못하게 되고 갈수록 갭이 커져가면서 수입은 수입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분유수입의 두번째 문제는 낙농가의 생산의욕을 급격히 감퇴시키고 포기를 유도함으로써 낙농의 성장이나 발전이 정지될 수 밖에 없고 국제적 경쟁이나 가능성을 상실케 한다. 소값 하락, 증산의욕 쇠퇴, 타 산업에의 전업이나 도산 등은 어려운 여건에서 이만큼이나 다져진 낙농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분유수입의 또다른 문제는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낙농가의 불신을 극도로 가중시키게 된다. 남던 우유가 불과 수개월 후에 모자라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남고 모자라는 정부 추정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질 뿐더러, 지금 수입하

**이 시점에서 정책의 최대과제는 낙농가의 증산운동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시책을 펴는 것이다. 남을 때 감산을 유도하였다면 모자랄 때 증산을 유도하는 시책은 너무도 당연하고, 수입개방 또는 외국산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불안이 가득한 우리 농민에게 정부가 안심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도 증산운동은 반드시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는 분유가 올해 수급조절용으로 그친다는 정부 주장조차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농민에게 민음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실로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 분유수입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1월14일 집유선 고정조치를 단행하여 유업체의 횡포나 비리가 있어도 낙농가의 원유는 일체 타유업으로 옮겨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할 수 밖에 없다. 낙농가를 위한 정책인지 유업체 편향의 낙농정책인지 낙농가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낙농가의 분유수입 반대가 그저 막연한 반대의사만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원유생산량을 1,848천톤, 소비량을 1,953천톤으로 보아 부족량의 분유 8천톤을 수입에 의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과연 국내 낙농가의 생산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 증산시책을 폼 때의 수급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낙농가 스스로 분유수입 대체방안으로 원유 증산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낙농가의 증산운동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정부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별 증산결의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낙농가에 대한 개별적 캠페인 차원의 대대적 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협회가 앞장서 주도하고 낙농가의 동참 노력이 발휘된다면 증산의 실질적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원유증산만이 분유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이라면 낙농가 모두가 외면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본다. 낙농가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원유증산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이 시점에서 정책의 최대과제는 낙농가의 증산운동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시책을 펴는 것이다. 남을 때 감산을 유도하였다면 모자랄 때 증산을 유도하는 시책은 너무도 당연하고, 수입개방 또는 외국산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불안이 가득한 우리 농민에게 정부가 안심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도 증산운동은 반드시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낙농가 스스로 증산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열심히 낙농에 종사하는 결의를 다지고 열심히 낙농에 종사하는 현실을 방관한 채 분유수입이 강행된다면 정부는 우리 농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급한 과제는 낙농가의 증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경영비의 인하노력 즉 사료비 절감을 위한 부가세 면세, 자가배합이 이루어지도록 옥수수 등 수입사료곡물의 농가유통 등 경영안정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우리 낙농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해야 한다. 1%의 원유증산이 분유 2천톤을 수입대체시킨다면 5%의 원유증산으로 정부의 분유수입을 저지시키는 단결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낙농가의 구심체인 협회로 일치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만이 낙농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다.